

내일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국민공감'이 성패 좌우

“더 내고 덜 받아” 국민불만 팽배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지론’ 등장
국민신뢰 높여야 연금개혁 이뤄져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료를 내는 나이를 연장하고 받는 나이를 늦추는 내용의 개편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반발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국민연금 지급 수준을 깎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으나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는 얘기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대통령에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까지 나서 논란을 진화하고 있지만 오는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베일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을 벗기 전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개편안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다.

15일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에서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을 예상해 현행 9%에 20년간 묵인 보험료율을 10.8~13%로 올리고,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003년부터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다.

그동안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진행돼 왔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은 70%에 달했다. 그러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당시 체계를 유지하면 연금재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정부는 첫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살에서 65살까지 늦추는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09년부터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2003년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안됐다. 이후 보험료 인상을 뺀 개혁을 완성했다. 이 개혁이 이뤄지던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특히 20년 동안 어느 정부도 보험료에 손을 대지 못했다.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1997년 정부 산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보험료율을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으나 반발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2003년에 이어 2006년에도 보험료율을 각각 15.9%, 12.9%로 올리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3차 재정계산

때인 2013년 7월에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개편안이 마련됐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백지화됐다.

이렇듯 과거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을 깎는 방안으로 논의돼 온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수령 개시 연령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되다 보니 노후에 돌려받을 연금액이 줄어든 것을 우려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오는 17일 오후 발표된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서비스센터 찾은 BMW 차량들

광복절인 15일 오후 대전시 한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해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8만7천41대로 전체 리콜 차량 10만6천317대의 81.2%가 안전진단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운행중지 발표에 차량 안전점검을 미루던 차량 소유자들이 대거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무죄에 “법원, 더 못믿겠다”

양승태 사법농단까지 비난 가중

“사법부 신뢰도 낮아 납득 어려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 비평 여론에 ‘사법농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미투(#MeToo)’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정황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비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정부비서였던 김씨는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대학원생 A(30)씨는 “김씨가 피해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한 이유는, 교수 손에 미래가 달렸다

는 생각에 성폭행 다음날에도 출석한 나의 처지와 비슷한 맥락일 것”이라며 “나를 포함해 이번 선고로 음식에서 용기를 내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저앉을까봐 겁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안 전 지사를 무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지난달 31일 공개됐기 때문이다. 같은달 법원이 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체식구 감싸기’ 논란을 부른 점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사법농단 사태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납득 못하는 시각도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범종·나유리 기자 joker@

‘애니멀 호더’ 막아라... 반려동물 사육기준 생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

사육공간·수의학적 처지 의무화 등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등 맹견 규정도

최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사람)가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육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초 서울 마포구에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고 유기견 수십 마리를 한 곳에서 키우다 이웃의 항의성 민원 끝에 십수 마리를 몰래 버린 사례가 있었다.

여러 선진국에선 방지책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는 부족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당국도 고민해왔다. 캐나다 토론토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게 하고

있으며 호주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울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자를 처벌해 동물 학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가운데 애니멀 호더가 주로 내팽개치는 부분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 운동·휴식·수면 보장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하면 신속하게 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해 사육주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도록 하고, 애니멀 호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동물의 사육 공간에 대해 ▲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을 것 ▲ 동물이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을 것 ▲ 가로·세로가 동물의 체장(體長·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

5배와 2배를 제공 ▲ 옥외에서 사육시 흙서·혹한·눈·비를 피할 쉼터 제공 등을 규정했다.

또 여러 마리를 키울 때는 동물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격리하도록 했다.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고통을 완화하고자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영양이 결핍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거나 “쉴 곳, 급이·급수 용기 내 분변·오물 등을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해 사육환경의 위생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맹견을 두고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잡종으로 규정했다. 반려동물의 종류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적시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금융사 업무보고서 142종 폐지... 효율·정확성 늘린다

금융회사들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업무보고서 142종은 아예 없애고, 166종은 보고주기를 기존 대비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부담 경감과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무보고서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규 감독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4년 말 1703종이었던 업무보고서는 지난해 말 1864종까지 늘어났다.

먼저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142종은 폐지한다. ‘신탁계정수지 현황’(보험) 등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동일인 대

출한도’(금융투자) 등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들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 금융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보고주기는 완화하고, 보고기한은 연장한다.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주기 대비 활용이 빈번하지 않아 주기가 길어지는 보고서는 166종이다. 저축은행의 ‘회사개황’, ‘사육 현황’, ‘연혁’ 등은 기존 월에서 분기 주기로 보고하면 된다.

보고주기와 감독·검사업무활용주기가 다른 보고서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은행의 ‘금융자산 범주별 분류정보’와 금융투자(증권)의 ‘신용공여현황’은 기존 월에서 분기 단위로 주기가 바뀐다.

보고기한 내에 잠정치를 제출한 후 확정치로 수정했던 167종의 보고서는 보고기한을 연장한다.

여신전문사의 ‘연체(관리자산 현황)’, ‘카드회원수 현황’ 등은 보고기한이 기존 10일에서 한 달로 늘어난다. 또 회계연도 말 결산시에 한해 은행의 ‘채권재조정 여신현황’은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개월에서 3개월로 보고기한이 바뀐다.

이밖에 57종의 보고서는 서식 내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작성요령을 명확화·구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서 정비로 시중은행의 연간 제출 업무보고서가 1780건에서 1550건으로 약 230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